

이행기논쟁과 대안세계화 운동

백승욱

I. 장기 21세기 -- 자본주의 이행 문제를 되돌아 보기

* 현존 사회주의가 국가자본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면....

- 윤소영, 『역사적 마르크스주의』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이어서 논의해 봄

1. 이행의 시대로서의 장기 21세기

* 돌아보았을 때 현시기는 아마도 이행의 시대로서 장기 21세기

- 1960년대부터 분출되는 당형태-국가중심-국유화로 이어지는 운동의 위기. 자유주의 지배이데올로기의 위기

- 현존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 중소논쟁에 이은 중국 문화대혁명이라는 계기
유로콤과 마르크스주의의 쇠신 (그리고 평의회 문제의 반복적 출현)

- 지연된 문제제기: 금융세계화에 따른 폭발(국가권력/정당/국유화 모델의 한계점: 소련해체/제3의길과 유럽 좌파의 우경화/발전주의 해체) --> 2000년대 들어 대안세계화 운동으로 이어짐

- 공산주의 운동 분출 했으나, 체계의 한계 내에서 --> 그러나 새로운 쟁점을 부각시킴

- 이행의 시대라는 규정: ①세계사적 규정 ②반복적이나 선형적이지 않은 과정 ③불균등발전

- 자본주의의 지속 불가능성 문제: 장기 16세기 상황과 대비

- 자본주의의 위기 --> 변신 --> 다른 자본주의 또는 다른 (더 나쁜) 체계
운동의 위기 --> 쇠신 --> 어떤 com/so

- 왜 장기 21세기인가

2. 자본주의 이행이라는 계기

-- 관심: 유일하게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이행이며, 그러나 그 방향은 특정 국지성 모델(북부 이탈리아)의 세계적 확장

(1) 자본주의의 이행논쟁을 넘어 장기16세기로 (50년대 이행논쟁과 다른 의미에서 자본주의 이행논쟁의 재검토 필요)

- 뚝/스위지 논쟁의 성과와 한계 -- 스위지의 타당성과 유럽 내 시각이라는 한계. 16세기와 18세기 사이를 규정하는 모호성(사회주의에 대한 모호성에서 반복 -- 다시 1국적 규정으로)

- 제노바/스페인 동맹 대 네덜란드 세계경제: 전자는 마치 20세기 사회주의처럼 기존 체계 내의 변신, 그리고 새로운 요소를 향한 연합

(2) 장기 16세기의 조건으로서 봉건제의 전반적 위기

- 삼중의 위기

①수취구조의 위기: 영주제의 위기

②억압구조의 위기: 국가의 위기 -- 집중성의 약화와 분산성의 강화. 새로운 공간이 열림 (새로운 국가들의 출현. 봉건제 벗어나는. 봉건 정치체와 대립되는 세력들에 대한 지원 공간)

③이데올로기의 위기: 교회의 위기

- 이러한 재분배적 제국 또는 세계제국의 위기의 반복성: ①다수 세계제국의 존재 ②'생태적 자기제약'의 작동 --> 위기는 다시 재분배적 제국의 건립으로 귀착될 수 있었다

- 장기 16세기의 이례성: 외부로부터 새로운 세계제국 확장의 힘의 약화('서방'의 등장 이전의 '동방'의 몰락)

- 자본주의 세계경제 형성의 돌파구: 출발은 '국가'단위. 경쟁 촉발은 고도금융이 --> 유럽 전반에 걸친 정치우위 하의 헤게모니 경쟁

(억압되지 않는 자본주의 세력의 강화와 국가간체계의 활용)

(3) 부정적 통과점과 긍정적 통과점

- 봉건제의 전반적 위기에서 두 가지 길의 가능성

- 긍정적 통과점: 농민적 길(소상품 생산) + 서유럽 봉건제 개혁기 기독교적 공산주의의 등장

부정적 통과점: 세계적 위기를 자본주의 세계경제 탄생으로 극복(지주적 길 --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변신)

- 전자의 한계: ①근본적으로 유럽차원에서 global한 움직임으로 나타난 후자의 힘에 비해, 전자는 위기로 열린 제약이 덜한 틈새에 자리잡음(고립분산적). ②후자가 국가간체계를 이용한 원형적 민족주의의 출현기였는데 비해(마키아벨리의 '신군주') 후자는 새로운 질서의 바깥에 ③전자는 기독교 이데올로기의 쇠신에 머물고 있었다. ④자본주의라는 힘에 대한 대응 불가능성

(4) 자본주의 이행의 구도

①유럽 세계경제 차원에서 진행. 개별 국가별로 따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체계의 문제

②그럼에도 상황을 주도한 것은 특정 '국가'이다. 그 국가가 중심무대가 되고, 어느 정도 힘을 가지느냐가 중요했음(네덜란드 대 합스부르크) --> 국가가 중요하나 국가를 단위로 이행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③이행에 따라 세계경제의 네트워크는 변형된다

- 개별 국가에 대해 '사회성격'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타당하기도 하고 타당하지 않기도 하다) -- 그 문제 해결은 18세기 후반 들어 자본에 의한 노동 포섭 본격화 이후

- 역전가능성의 문제: 최초는 국가간체계의 공고화(1648년 베스트팔렌)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고유한 생산력 기반이 마련된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선 18세기 이후의 세계적 팽창 --> 이행의 과정은 생산관계의 재편에서 시작하고, 생산력 기반이 마련되는 것은 나중의 것이다. 이행에서 '정치우위', 국가간체계의 변화가 갖는 절대적 중요성

3. 형식적/실질적 포섭

- 생산력 기반 없이 생산관계만 변화한 것으로서 형식적 포섭(산업자본주의 하에서는 제한

적) : 중상주의/생산비용의 내부화 과정에서 영국에서, 즉 생산을 자본주의 고유한 영역으로 장악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짐

- 이행의 과정에서 국가의 중요성 (이행에서 정치우위: 경제주의 배제)

①원거리 무역 독점과 방어로써의 군사력: 국가간체계에서

②매뉴팩처의 육성: 자생적으로는 경쟁력 없는 매뉴팩처라는 브로델의 지적(중상주의의 필요성)

③노동력 상품의 형성(실질적 포섭의 과정에서 더욱 중요해짐)

4. 사회주의에 주는 함의 (자본주의 이행의 유비와 유비의 한계)

(1) 장기간의 세계적 과정이라는 점

- 개별 국가별 아니다

(2) 긍정적 통과점과 부정적 통과점의 등장

- 더 나쁜 것으로 전환이라는 윌리엄스 테제 (역사학자의 직관이라는 점)

(3) 전체 동시적 변화 아니라 헤게모니 지역으로부터 파급이라는 점

- 그러나 지중해 세계경제가 유럽세계경제로 확대되는 방식의 모델로 가겠는가?(그럴수도 아닐수도) --> '자본주의'는 세계경제가 되지는 못했지만, 기존 세계 내에 그 형태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논점 (그렇다면 공산주의는?)

(4) 국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

- 그러나 국가간체계 강화하는 자본주의적 길과 반대 (국가장치 강화의 역사와 반대로)

(5)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가 다른 자본주의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 생태적 제약의 한계?

(6) 이행에서 소유제 문제는 부차적 (오히려 관계의 문제)

(7) 중상주의의 길로서 국가자본주의: 프랑스 혁명이 근대 정치지형을 새롭게 열고 이데올로기적 구도를 전환시켰다면, 러시아혁명은 무엇을 남겼는가? 부정적 준거점 뿐일까?

- NEP 이후 소련사회주의 경험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과연 있었는가(특히 사회운동의 역사로서) -- 국가계획이라는 측면에서 경제학적 관심사는 다수 있지만, 대중운동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부분은 있는가? 오히려 지배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이론적 쟁점들만 존재 -- 중국 혁명의 경험과 대비되는 부분

(8) 이행의 시대에 3중의 위기

①수취체계: 미국헤게모니 이후 새로운 체계적 축적순환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노동의 포섭을 전제한 미국 헤게모니 이후의 전망이 쉽지 않다는 점. 재생산 비용의 내부화의 전망이 어렵다는 점 -- 선별적 포섭과 다수의 배제라는 미국 축적의 구도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위기는 남-북 사이에 심화될 가능성

②국가의 위기: a)국가간체계의 위기 b)주변부에서부터 국가성의 약화, 국가의 폭력독점의 약화 (그 부정적 통과점으로서의 군벌체제, 긍정적 통과점의 가능성은...)

③이데올로기의 위기로서의 자유주의 위기: 19세기 자유주의, 20세기 자유주의의 위기 이후 자유주의가 자유주의 내에서 쇠퇴 가능한가? (봉건제 틀에 기여하는 기독교에서 자본주의 축적에 결합한 기독교로 전환과의 유비는?)

II. 한국사회성격논쟁 재론

1. 신식국독자의 문제제기

(1) 과잉결정된 정세 -- 이론/운동에서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전통의 복원이라는 과제 --> 어떤 마르크스주의인가

- ①북한과 NL ②현실 사회주의 위기 ③문혁 이후의 사회주의 ④유로폼과 New Left 이후 --> 의식하지 않았으나, 그리고 반드시 이런 맥락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었으나, 문제가 제기되는 특정한 방식을 규정. 그리고 이것은 이미 한국의 정세 속에 작용
- 스탈린주의(스탈린편향)에 대한 문제제기의 중요성--> 레닌으로 회귀의 의미 (경제주의/주의주의라는 비판을 통해)

①기본모순에 대한 주요 모순의 우위: '정세'의 복귀 (자본주의에 대한 투명한 이해 비판)

②자본주의 생산력주의 이해 비판(근대화론적 함의) : 착취로서의 자본주의

③시대적 규정: 전반적 위기론

- 그러나 어떤 점에서는 SMP론의 한계 내에서 제기되는 PDR론

(2) 신식국독자의 긍정점-- 자본주의 세계체계라는 점에서

①착취로서의 자본주의 (이는 두 번째 측면과 연관된다)

②세계적 규정성으로서의 자본주의 (온전하게 역사적 자본주의는 아니나, 일국적 틀로 환원되지 않는)

a) 독점강화/종속심화, 또는 발전단계/발전유형의 구분 --> 중심/주변/반주변이라는 쟁점

b)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위기론(국독자 경향론으로 가는 고리): 위기에 대한 자본의 대응과 노동의 대응이 만들어 내는 국제적 정세

c) 중국혁명의 경험과 관료자본주의론 (경제주의적 해석에 대한 비판)

--> 자본주의에 대한 단계론을 넘어 정치적 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반)식민지에서 기원하는 자본주의의 특수성을 포착

③'정세'의 우위: 동맹에 대한 사고를 복원

④프롤레타리아 독재: 장점 ①과 관련되면서, ②에서 제기되는 사회구성체 재생산에서 국가의 고리를 강조 (진화적 이행관의 거부, 변혁의 관점)

(3)한계

①세계 자본주의라는 함의가 분명해지지 않음 -- 20세기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한계)

②특히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금융화에 대한 이해의 맥락 (자본주의의 역사. 자본운동/노동운동이 전개하는 역사)

③『제국주의』에서 보는 국독자적 이해의 역사적 한계성

--> 자본 재생산은 전지구적으로 진행된다는 점

- 전지구적 차원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사회구성체적 수준에서의 재생산(이데올로기론의 문제)

- 그러나 자본주의론의 점에서 한계는 이행론에 비해 덜 문제였을수도

그런 점에서 ④국독자를 이행의 고리와 연결시키려는 강박이 존재했던 측면이 더 문제일 수도(레닌 『제국주의』의 함의 극대화)

2. 이행론의 문제

(1) 출발점에서 스탈린주의 문제

- 현실사회주의 비판과 스탈린주의 문제에 대한 발본적 문제제기 --> 레닌의 복원
- > 그러나 그 과정에서 레닌의 모순이라는 것이 문제됨(『무엇을 할 것인가』 대 ‘4월테제’.
- NEP 시기에 오면서. 대중정치적 모호성, 그리고 그것과 결합한 테일러주의의 문제 --> 결국은 ‘4월테제’와 혁명 이후 사회 사이의 긴장이 문제였음)
- 이는 NK/NL이라는 문제 때문에 강화된 것임 -- 스탈린주의 문제의 핵심의 그 자본주의적 측면과 사회주의적 측면이 문제 -- 그리고 그 양자 결합 고리로서 이행론이 문제임
- > 그러나 사회주의 논점 본격화하기 이전에 현실 사회주의 몰락, 그리고 서사연 해체 (사회주의론이 본격적으로 논점으로 등장한 적은 없다. 다만 이행론에서 강령의 문제 정도 차원)

(2) 레닌의 이행기론 해석의 문제

- 레닌 초기 해석을 상대화하고 후기 저작을 중시(『제국주의』, 『국가와혁명』, 『4월테제』)
- 후자 입장에서 전자를 해석
- 이행기 레닌에게 중요한 세가지 글 중에서 『임박한 파국』에 강조점
- ①4월테제(소비에트) ②임박한 파국(이행의 물질 토대) ③(『국가와 혁명』 + “프롤레타리아 독재 하의 정치와 경제”(사회주의 하의 모순. 그리고 국유화/사회화)
- 4월테제와 그 이후 저작들 사이의 차이 (4월테제는 소비에트를 특권화하고, 이를 위해 당의 사업을 전환할 것을 요구): 그 이후의 저작은 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성장전환’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점
- *특이점: 테제 내용
- ①혁명 방위주의 비판 ②프롤레타리아와 농민 권력 장악 가능한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과정 ③임시정부 지지 기만성 ④볼셰비키는 소수파, 소비에트가 중심성 ⑤소비에트 공화국 ⑥농업소비에트와 국유화(여기에만 국유화 등장) ⑦단일 국립은행과 그에 대한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의 통제 ⑧사회주의 도입 아니라 사회적 생산과 생산물의 분배를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 통제 하에 두는 것 ⑨당의 임무: a)당대회 소집 b)당강령 교체(제국주의/콰뮌국가/최소강령개정 c)당명 변경 ⑩새로운 인터내셔널 --> ①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②당의 위상은 소수파. 소비에트 지지의 일관성 ③국유화의 부차성
- 「임박한 파국」 중심의 논지: 사회주의와 구분되는 PDR의 시기를 명시화 (사실은 ‘4월테제’와 일정한 긴장관계 -- 우리에게 모호하게 남았던 것: 우리가 ‘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 이중의 규정 속에서 ①현실 사회주의 비판 ②사회주의로 성장전환)
- > t.t. 시기와 달라지는 것으로 이행강령이 제기됨. 특히 핵심은 (조건 붙은) ‘국유화’ 강령 ①독점자본의 국유화가 사회주의 가는 물질토대 된다 ②민주주의적 요구들이 최소강령에서 이행강령으로 가게 되는 제국주의 시대의 규정들 ③그 결과 ‘성장전환’론
- 이것은 레닌의 우클라드론의 전제에서 나온 결론임: 쟁점은 국유화된 부분이 사회주의적 우클라드인가? --> 국유화/사회화 구분이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해석이 지배적
- > 부하린의 국가자본주의 트러스트론과 레닌의 차이점이 존재: ①국유화만으로 안된다는 점 ②독점은 경쟁의 상부구조라는 점 (그래서 사회주의로 직접이행은 불가능하다는 점)
- > 나중에 부하린은 레닌을 수용하지만 그것이 러시아 낙후론을 인정했기 때문인지, 레닌

의 기본논지를 수용했기 때문인지는 논란여지 있다

[그럼에도 국독자론은 일국일공장체제의 기반이 됨. ①전국 경제통제 가능 ②모든 것을 국유화하지 않고, 핵심만 국유화하더라도]

(3) 네프시기 레닌의 반성

- 핵심은 ①계급동맹 ②국유화/사회화(여기서 국유화건 국독자건 소유제 개조가 문제가 아니다) ③문화혁명(국가장치의 문제) -- ‘프롤레타리아 독재 하의 국가자본주의’라는 규정

- ‘사회주의(이행기)의 계급투쟁’: 그 대상과 조직은?(소비에트가 복권되지는 않는다)

- 혁명에 의해 강요된 자기제약이었다(실패해서는 안된다는, 장악한 국가권력 유지의 강박): 그러나 ‘4월테제’가 부활하지는 않고, ①당내 ‘정풍’과 ②대중민주주의를 강조한다 (여기에는 핵심적으로 ①관료제의 문제는 모호하게 남고 ②상대적 잉여가치 질적구조 문제, 또는 달리 말하자면 자본주의적 기술의 지적차이의 문제에 대한 고려가 없다) --> 소비에트 우위가 당이 지도하는 대중의 재교육 차원으로 정리됨

‘당’, ‘소비에트’, ‘노조’ 셋 사이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나, 당의 우위 하에 다른 두 가지 조직의 문제제기가 봉쇄되는 결과를 낳음

(세가지 억압 ①소비에트 ②레드페트로그라드 ③수병반란)

- ‘국가자본주의’가 우클라드에서 이행기 규정으로 바뀐(즉 프롤레타리아 독재 하의 국가자본주의 = 사회주의로의 이행기)

-- 우클라드로 국가자본주의는 국독자 하에서 독점자본 국유화 통해 다른 부문 계획·통제 가능이라는 사고. 양보로서 국가자본주의(cf. 선진국에서는 사회주의 직접이행 가능이라는 사고 --부하린적 구도: 러시아 낙후성론) -- 그렇지만 줄곧 국유화보다는 국가자본주의 강조한 점 주목해야

- 이데올로기 혁명이라는 문제에 대한 불명확성: 재생산이라는 문제. 『국가와 혁명』에서 제시되는 문제의 공백점

(4) 우클라드론이 남긴 한계

- NEP로 가면 우클라드론 상대화 됨

- 자골로프 비판의 한계: 국유화된 우클라드론 사회주의로 규정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과의 관계에서 모순을 발견 (소유 아닌 계획성에서 사회주의 요소 찾음에도)

--> 부즈갈린의 자기비판(그 우클라드에서 관료제 문제가 바로 출현)

- 일국사회주의론의 모호한 한계가 봉합됨

(5) 사회화의 문제

- 형식적 사회화와 실질적 사회화

: 전국적 회계와 통제의 중요성

- 레닌에게서 나타나는 시기규정의 모호성

- PDR을 시기로 규정할 때 독점 국유화 + 형식적사회화(전국적 회계와 통제가 함의하는 바)

3. 사회성격론으로 다시 돌아오면

(1) 프롤레타리아 독재

- 전략인 동시에 국가장치 파괴(국가소멸) 태제 -- 국가권력->국유화->사회화라는 구도 상대화
- NEP 이후의 전환이 사회주의적 길인지 어떻게 규정/통제되는가? 그리고 그것은 대중 주도성 강화하는가? : 당의 위상 문제

III. 중국과 문화혁명

1. 중국은 사회주의인가?

- 소련을 국가자본주의로 비판하는 출발점 중 하나인 중국의 사회성격은 무엇이었는가? --> 마오자신의 의문이기도 함
- 무단혁명론과 계속혁명론
 - : 후자로 가면서 대과도기론이 정립됨 -- 그러면 과도기로서의 사회주의는 일국적 규정인가 세계적 규정인가? (일국적 규정이라 하더라도, 일국적 규정과 세계적 조건의 차이는 무엇인가?)
- 소련과 달리 중국이 역사적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 사회주의의 모순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그것이 대중운동과 결합한 역사

2. 마오에게서 레닌의 분리된 두 계기

(1) 마오의 신민주주의 혁명론

- 레닌에게 『두가지 전술』, 『4월테제』, 『임박한 과국』 세 요소가 있다면
 - 특히 관료자본론의 마오는 『두가지 전술』과 『임박한 과국』의 레닌을 수용함으로써 중국 혁명론을 제기
- 매관적·봉건적 국독자로서의 관료자본주의론
 - > 후진적 조건 하에서 사회주의의 가능성이라는 문제제기 -->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 > 이는 생산력 조건 없는 상태에서 생산관계의 개조라는 쟁점을 제시(자본주의 이행과정이 제기한 쟁점이기도 하다): 이는 ‘정치우위’를 동반
 - > 결국 사회주의 이행의 시대라는 규정성을 지닌다
- 그렇지만 동시에 독점 국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레닌의 국독자론을 계승
- 그러나 곧바로 이 틀은 무효화하고 문제로 부각된다 -- 소유의 사회주의적 개조 의미의 상대화 --> 대약진 시기 마오의 무단혁명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노선문제가 최종적으로 결론 나지 않았다)

(2) 부활하는 4월테제의 계기 -- 문화대혁명

- 모든 권력을 인민에게: ‘조반유리’, 그리고 ‘사령부를 포격하라’ -- 그리고 그 반복된 전거로서 “파리코문”을 모방한 상해코문(1967.1.)
- 대과도기론으로서 사회주의

(3) 그러나 중국이 갖는 특수성

- 연안전통. 강서소비에트 -- 준비된 혁명이라는 차이와 근거지 코문의 전통 (공장관리위원회 전통, 그리고 이후 양참으로 나타나는 시도 -- 그것이 문혁기 교육혁명으로 이어짐)

3. 문화대혁명

(1) 쟁점

① 과연 사회주의인가?

② 왜 자본주의 회귀는 가능한가?: '주자파'의 문제

③ 어떻게 이 회귀를 막을 수 있는가?

* 핵심 쟁점은 --> 이데올로기 혁명은 있었는가(의식혁명 아니라 이데올로기 실천에 대한 혁명으로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에 대한 전복)

- 당에 대한 대중의 공격

- 생산관계의 전복

* 문혁의 신화와 현실의 사이에서

- 새로운 이상적 모델이라는 신화와

- 조직적 대안이 형성되지 못한 채, 일반화한 폭력으로 종결된 과정(내전 상황이었을 뿐인가)

- 그러나 4구타파와 생산관계 변혁이라는 대립선, 보황파와 조반파의 대립이라는 구분선의 존재 --> 지금도 계속되는 시도들 (충칭, 성무런 사건, 상해 노동자 조반파, 정주 노동자 조직) --> 공장관리조직이자 지역 정부를 대체하는 조직으로서 조반파 연합의 혁명위원회

* 「문혁 16조」에서 (천보따가 초안)

- 9조: 파리코문에 대한 명시적 근거: 혁명위원회 선출시 파리코문 원칙에 따른 전면 선거

- 4조: 대중이 운동중에 스스로 자신을 교육하도록 함 --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은 대중 스스로 자신을 해방할 수 있을 뿐이며, 어떤 대리 방법도 채택할 수 없다”

- 그러나 16조는 당이 주도하는 대중에 의한 당정풍 운동이라는 범위, 그리고 상부구조에 대한 혁명이라는 범위에 머물러 있었다. (무투 비판, 다수 포용 노선)

(2) 정리되지 않는 쟁점들

① 문혁의 실제 대립의 쟁점은

② 이데올로기 혁명으로서 문혁의 정리가능성

③ 문혁의 조직은: 조반파

* 문혁과 폭력의 문제

- 그러나 에피소드: 조반파에 대한 국가권력의 탄압(①인민해방군 ②당(계급대오 정돈 5.16 병단 사건) ③감옥)

- 새로운 시빌리테를 형성해 내지는 못함 (문혁과 성문제에 대한 억압적 태도)

: 구조의 전환 대신 구조를 개인적 복수의 문제로 치환(무투와 지식인 억압)

- 정파성이라는 문제: 조반파의 종파주의(대연합은 역으로 군개입의 명분을 높여줌) -- 학생 공작대와 공선대라는 시도

- 문혁의 반지성주의의 여파(마오의 일궁이백이라는 논지 -- 주사로 이어진 마오주의의 한 측면) [한국 사회에서 주사가 마오주의에 대한 대체관계라는 가설]

* 문혁과 교육혁명

- 기술에 대한 자본주의적 통제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지적 차이의 문제)

상해 7.21대학 경험(노동자중에서 학생 선발해 단기 교육 후 생산에 재배치) + 동계대학 모델 5.7공사[학교와 현장을 결합--주로 농촌지역] + 공농병대학생

- 7.21대학 모델은 상해 공작기계창에서 시작: 마오의 7.21 통지 내용은 ①대학 졸업후 간

부 배치 중단하고 노동자로 배치후 합격 거치도록 ②고참 노동자 중에서 대학교수 선발 ③기층에서 정치사상 훌륭한 노동자로 2-5년 경험 거친 사람에서 대학생 선발 ④사상 비판에 집중 (대학을 공장 내 건립하는 방식으로 진행)

- 기술 뿐 아니라 정치 교양 강좌 특강을 위해 북경대 교수가 북경 신화인쇄장에 강연 온 사례

- 공농병 대학생: 1979년 7월 제한적으로 이과에 한해 대학생 모집이 재개된 이후 첫해 입학생은 41870명. 대부분이 공농병 출신 (동체대학의 경우 1/3은 공장에서 생산에 참여해야 함).

(교육혁명은 정치에서 문화혁명이 69년 종료된 것에 비해, 1970년대 초반 지속됨)

(3) 문혁의 영향력

- 노동의 실질적 포섭이라는 쟁점이 세계적으로 부각

(4) 중국 현시기 운동의 난점

- 국유화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난점. 통제의 문제와 노동의 조직화 문제 등장 어렵다(서산회의)

- 그럼에도 정주 사례에서 보이듯 노동자의 공장인수 운동도 등장(그러나 공장 자주관리는 운영의 난점에 봉착)

IV. 대안세계화와 다시 장기 21세기

1. 이행의 시대

2. 국가

(1) 자본주의 이행과정과 차이점

- 자본주의 이행과정에서 국가별 중심의 형성 -- 국가간체계의 강화를 통해 자본주의 세계체계를 형성하는 과정

(2) 국가와 전지구

- 국가는 이테올로기 재생산의 사회구성체로 작동하나, 쟁점은 항상 국가를 넘어선다는 점

- 국가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역사적 조건들(전쟁 + 발전주의 민족경제)의 상대화의 조건

- regional 규모에서 연합적 운동의 복원 가능성

- 국가 속에서가 아니라 국가를 제약하는 운동으로서 존재(시빌리테가 변혁의 조건으로서 작동한다는 것의 함의): 국가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하는 신사회운동의 한계(다시 국가권력 테제로 돌아갈 때도 동일한 함의)

(3) 평의회 구도의 복원

(4) 노동력 상품화의 문제

- 자본주의가 안정적 세계체계 된 이후에 노동력 상품화의 길이 진행된 역사

그러면 그 역의 길은?

- 개인적 소유의 복원: 상품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노동권의 문제)
(스미스적 노동관 대신 마르크스적·폴라니적 계기를 통한 임금제도 자체의 철폐라는 논지)
- 국가의 코포라티즘 틀 강화하는 운동과 그렇지 않은 운동

(5) 국유화가 상대화된 이후

- 국독자 상부구조론과 브로델의 자본주의 상부구조론의 함의
: 전자는 국유화로 나아가는 함의, 후자는 정치우위의 함의(후자에서 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함의를 볼 수 있다는 점)

3. 새로운 인터내셔널

- 동일한 조직활동 방식 요구되는 것 아니고, 지역별/역사별/정파별 상이성이 오히려 요구됨

* 부즈갈린(러시아의 대안당)의 문제제기

(1) 사회주의는 장기의 전세계적인, 비선형적 과정이다 (공산주의 첫단계 아니며, '사회화된' 자본주의도 아니며, 세계를 경제적 필요와 소외에서 자유의 영역으로 변혁하는 국제적인 비선형적이고 모순적 과정이다) (20세기 사회주의는 돌연변이 사회주의라고)

(2) 연합적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에 우선성이 두어짐(노동자의 자기조직)

(3) 연합과 사회화를 중시하며, 기업권력 제어하는 PDR을 국가별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

(4) 그러나 관료적인 국유화보다는 집단적 통제가 가능한 사회화된 사적 자본주의가 더 나올 수 있다.

(5) 그럼 누가 집권? -- 전술적인 문제로 보아야 (그리고 이것은 퇴행도 가능한 부분이다)
--> 권력유지에 집착하여 연합적 측면 포기해서는 안된다

==> 그렇다면 대안세계화 운동이 제기하는 공통의 문제의식

- ①세계화의 이론 분석
- ②전지구적 이행과정(국제주의)
- ③대중 창의성과 주도성 중심의 연합적 사고
- ④소유의 문제를 수단으로 파악
- ⑤집권의 문제를 전술적으로 파악
- ⑥대중 구성의 변화에 주목
- ⑦정파/현장을 넘어서는 연합적 조직틀
- ⑧경제/정치/사회 혁명의 구분의 지양